<뉴스 바로 보기 4주차 과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컴퓨터공학과

20180976 김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입법을 서두르며 이에 따른 찬반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2020년 10월 13일에 진행된 MBC ‘100분 토론’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이 토론에는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과 감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참여하였다.

먼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4년 전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언론이 비선 실세를 밝혀낼 때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으로 기자들의 위험부담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중재위부터 기자의 월급 가압류까지 이미 언론 보도 피해구제 절차가 잘 되어있음을 강조하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령을 수행하려는 기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상반된 주장으로, 노웅래 최고위원은 현행 법제도로는 피해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고,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시행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두 측의 이러한 상반된 주장과 이에 따른 여러 근거들을 놓고 봤을 때 본인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제도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미디어오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이 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국가 내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5년 연속 꼴지를 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이며 가짜뉴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언론의 공적 보도를 위협한다는 언론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이미 언론이 위험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언론소송에서 최근 10년간 언론사는 매년 2건 중 1건 이상의 소송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6년간은 3건 중 2건을 이겼다. 언론 보도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값과 중간값도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언론보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짜뉴스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